

정보화 역기능의 파수꾼 “한국정보보호센터” 출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정보통신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전적인 후원아래 지난 4월 10일 출범했다.

멀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망망대해에서 벌어질 각종 하이테크 범죄를 평정하기 위해 뜻을 올린 것이다.

이같은 정보보호센터의 설립에 대한 움직임은 몇년전부터 있었으나 지난 95년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되면서 본격화됐다.

구 근 우 전자신문 기자

정부는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정보통신시스템의 비인가 사용, 인터넷을 통한 전산망 해킹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사회문제, 즉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보호기술의 배양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 “한국정보보호센터”설립근거를 마련, 국가의 정보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미국은 87년 컴퓨터보안법을 제정, 국방부 산하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국가 컴퓨터 보안센터(NCSC: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와 상무부 산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의 컴퓨터보안본부(CSD)가 각

각 설립돼 현재 정보보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NCSC에서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보안 시스템은 정부, 정부와의 계약자 또는 산하 기관등에 의해 운영되는 통신 및 정보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워너 개정안”에 의해 정의된 기밀정보, 정보활동, 국가안보와 관련된 암호 활동, 군사력 분야의 명령, 무기 시스템 및 장비와 특히 주요한 정보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상무부의 NIST에서는 개방시스템 환경 하에서 워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미기밀정보의 손실과 노출을 방지하며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은 외무부 산하

에 CESG(Communication Electronics Security Group)를, 상공부 산하에 CCSA(Commercial Computer Security Agency)를 각각 두고 있으며, 독일은 내무부 산하에 GISA(GERMAN Information Security Agency)를, 캐나다는 국방부 산하에 CCSC(Canadian Computer Security Center)를 두고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보보호센터 출범은 이들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매우 늦은 편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보보호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들 선진국가들과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는 창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 민

간기업들의 이분야 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보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앞으로 국가전체의 정보자산을 각종 바이러스와 해킹등 보안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국가 표준의 제정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호시스템의 평가 △인증 △교육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조 관리뿐만 아니라 △보안사고의 대응등 정보보호체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국정보보호센터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정책 기술지원사업을 비롯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행사업을 주요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정보보호센터가 추진할 정책 기술지원사업으로는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연구업무를 비롯해 정보화 촉진으로 인한 부수적 영향분석,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정보 지원, 전산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운영, 해킹방지 기술지원, 방화벽(Firewall)시스템 구축·운영 및 기술 지원, 전산망 안전진단기술 자문,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 및 컴퓨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가 추진된다.

연구개발사업은 암호알고리즘 연구, 식별 및 인증 기술연구, 키 관리 기술 연구, 전산망 보안기술(전산망 접근통제시스템 기술 및

침입탐지·추적기술 연구)개발, 컴퓨터 범죄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기술 개발 및 보급,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보호기술연구 개발, DB보안기술 연구, EDI·모뎀·FAX 등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기준 및 지침 연구 개발,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 평가 체계구축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따라 정보보호센터는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정책·기술지원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부” 그리고 평가시행사업을 수행하는 “기준평가부”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정보보호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와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체계를 정립해 정부·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취급하는 정보자산의 중요성에 부합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이 원활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산·학·연의 분산된 소규모 연구결과들을 센터를 통해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관련 기술과 이론의 발전도대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정보보호센터가 국내 정보보호 추진 체계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를 중심으로 정보

통신부를 비롯해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정보범죄수사센터, 연구기관, 표준기관, 관련학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조직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보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인 산·학·연에 이르기까지 법·제도적, 관리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의 정보보호대책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정보보호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어쨌든 정보화의 관건은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얼마나 줄이며,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하는데 달려있다. 또 막중한 책임이 모두 새로 출범한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맡겨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고성능의 제동장치가 있어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듯이 보다 국가사회의 정보화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엄청난 돈과 인력, 시간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관계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각오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산·학·연의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